

“자본은닉·탈세 우려… 스테이블코인 그림자 꼼꼼히 살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원화 ‘실질적 수요’ 근본적 의문”
“日의 외환환 규제회피 방지 규제
우리 규제체계 수립에 참고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금 은닉, 탈세 및 자본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란 금융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준비자산 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등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달러·유로·엔화와는 달리 아직 국제화 수준이 미미한 원화의 경우, 과연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면,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비기축통화로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착되면 K-콘텐츠 같은 강점 산업을 결합해 세계를 더 큰 무대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도입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

까지 면밀히 살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 목적으로 발행돼, 일정한 고정가격으로 언제든지 법화로의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전제로 하는 다른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금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고 은행 예금, 단기 채권, 비트코인 등을 준비자산으로 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일정하보니,

지급수단적 성격을 띄게 됐고 테더(USDT), 서울의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요건 강화, 자금 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등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가결시킨 바 있다.

한국은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자격 기준, 지급준비금 요건, 인가제 등을 담은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 지급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외환규제 정책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자금세탁,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외환 모니터링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자본의 국경간 이전 규모가 증대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주변호사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외환법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지급수단적 기능에 주목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화를 통한 지급 및 수령, 자본거래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 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제 수준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므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규제 적용 범위와 수준에 관한 세밀하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여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 등 대립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대법관, 6만쪽 읽었는지 알아야”
野 “대법관 압박 수단으로 일정 추가”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과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주요 청문회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예고됐지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여야는 10월 15일 대법원을 현장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을 추가하는 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쪽

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현장 방문 일정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음에도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운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를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AI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법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고, 그때 국회에서 (국감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이 추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시도 관련 흐름을 설명한 뒤 “본질은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성급하게 해서 대선 개입을 했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기업 미래위한 선택” vs “이재명 구하기”

여야 ‘배임죄 폐지’ 이견

민주당 “정당한 기업 활동에 날개, 질서 어지럽히면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형법·상법상 폐지 구분 손해끼친 기업가에 면책주는 법”

당정이 30일 배임죄 폐지에 한 뜻은 모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당은) 형법상, 상법상 배임죄 폐지인지 구분해야 한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 (민주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기업가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법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금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 밖에 없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글로벌 완성차 경영전략 ‘친환경차’로 수정

>> 1면 ‘울인서 조율로...’서 계속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차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아우디는 2033년 내연기관차 생산 종료 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10년 간 내연기관차 생산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전환을 선언했던 포르쉐와 오펜데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포르쉐는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일렉트릭에 이어 순수 전기 카이엔과 718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2030년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 브랜드인 오펜데는 지난 2021년 스텔란티스 EV 데이에서 2028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2027년 EREV모델 출시를 예고했으며 기아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픽업트럭에 대한 적용을 검토중인 상태다.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 램은 하반기 EREV 픽업트럭 램차저 1500을 출시할 예정이며, 포드는 대표 상용 밴 트랜짓의 EREV 버전을 2027년 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EREV는 내연기관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1회 충전 시 900km 이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 ‘중간 단계의 전기차’로도 불린다.

/*양성운 기자 ysw@